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해외직접투자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 해외투자의 국내 유턴 '유인책' 필요

발행인 : 하 태 형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 원,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4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해외직접투자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 해외투자의 국내 유턴 '유인책' 필요

Executive Summary	i
1. 해외직접투자(OFDI) 증가	1
2. 한국 해외직접투자(OFDI) 증가의 특징	4
3. 국내 U턴이 필요한 투자 추정	10
4. 시사점	13
【HRI 경제 통계】	16

□ 해외직접투자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 한국 해외직접투자(OFDI) 증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OFDI)는 잔액기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시장의 투자 한계를 벗어나는 해외투자는 생산 및 수출에 긍정적이나 국내투자 부족으로 이어져 생산 및 고용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FDI 수치 기준으로, 2008년 이후 해외투자 순유출 국가가 되었다. 비금융기관의 해외 금융·보험업 건별 투자한도 폐지(2006년), 개인의 해외직접투자한도 증액(2006년) 등으로 한국의 FDI 수치는 플로우 기준으로 순유출을 지속하고 있다. 자원개발 부문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FDI 수치는 플로우 기준으로 순유출 국가이나, 그 규모가 축소된다. 이에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순유출 전(1991~2005년)과 순유출 후(2006~2014년)의 현황 점검을 통해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 해외직접투자(OFDI) 증가의 특징

(투자 규모)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와 순유출 규모는 주요국(이태리, 영국, 독일, 대만) 대비 작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OFDI) 규모(GDP 대비 14.0%)가 비교대상 4개국 평균치(GDP 대비 28.1%)보다 14.1%p 하회하였고 외국인직접투자(IFDI) 규모(GDP 대비 12.0%) 역시 비교대상 4개국 평균치(GDP 대비 15.9%)보다 3.9%p 낮았다. FDI 순유출 전환 당시 기준으로 비교 대상 국가의 평균 1인당 GDP는 11,500달러로 한국(20,475달러)보다 8,925달러 낮았다. 한국의 FDI 순유출 규모는 잔액기준으로 GDP 대비 2.0%로 4개국 평균값(GDP 대비 12.2%)보다 10.2%p 하회하였다.

(투자 국가) 해외직접투자의 대상국은 순유출 전에 미국과 중국 중심에서 순유출 후에는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 캐나다의 비중이 커지면서 다변화 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순유출 전(1991~2005년) 평균 48.1%에서 순유출 후(2006~2013년) 35.2%로 하락했다. 반면,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 그리고 캐나다 등 4개국 비중은 순유출 전(1991~2005년)에 9.6%에서 순유출 후(2006~2014년)에 18.7%로 커졌다.

(투자 지역) 아시아와 북미 지역을 넘어 유럽과 중남미, 그리고 대양주 지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투자 지역이 세계시장에 골고루 퍼져있다. 아시아와 북미가 전체 투자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순유출 전(1991~2005년) 71.2%에서 순유출 후(2006~2014년) 64.6%로 작아졌다. 3개 지역(유럽, 중남미, 그리고 대양주)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순유출 전(1991~2005년) 26.1%에서 순유출 후(2006~2014년) 32.4%로 커졌다.

(투자 목적) 해외직접투자의 목적은 '현지시장진출'과 '제3국진출'을 위한 투자의 증가로 국내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반면, 산업활성화 지원을 위한 투자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현지시장진출'과 '제3국진출'을 위한 해외직접투자는 특히 순유출 후(2006~2014년)에 크게 늘어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내 산업활성화 부문 중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순유출 후(2006~2014년)에 크게 증가하나 '수출촉진'을 위한 투자의 비중은 크게 작아졌다. 최근에는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개방 수준 확대로 현지기업과의 공동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투자 동기가 종전의 '수출촉진'에서 '현지시장진출'로 바뀌고 있다.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는 국내 경제의 해외자원 의존도가 높은 것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투자 업종) 투자 업종이 **순유출 前에는 제조업 일변도에서, 순유출 後에 광업, 금융,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부문의 투자가 증가했다.** 제조업의 비중은 순유출 前(1991~2005년)에 52.8%를 차지했으나 순유출 後(2006~2014년)에는 31.0%로 작아졌다. 반면, 광업(순유출 前 5.1%→순유출 後 22.7%), 금융 및 보험업(순유출 前 3.7%→순유출 後 10.2%),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순유출 前 3.2%→순유출 後 8.4%) 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기술 수준) 순유출 後에 제조업 투자는 **고기술 부문이 주도하는 반면, 저기술 부문의 투자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작아졌다.** 전체 제조업 투자에서 고기술 부문의 비중이 순유출 前(1991~2005년) 24.7%(77억 7,300만 달러)에서 순유출 後(2006~2014년) 40.1%(268억 달러)로 크게 증가한 반면, 저기술 부문은 순유출 前(1991~2005년) 20.7%(65억 1,200만 달러)에서 순유출 後(2006~2014년) 15.1%(101억 달러)로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 중에서 고부가가치 부문(첨단기술과 고기술 부문)의 비중이 순유출 前(1991~2005년) 60.6%(금액 190억 7,300만 달러)에서 순유출 後(2006~2014년) 66.1%(442억 달러)로 커졌다.

■ 국내 U턴이 필요한 투자 추정

(국내 투자기회 손실)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내로 유턴이 필요한 투자 규모는 순유출 後 연간 평균 34억 달러로 추정된다.** 제조업 부문에서 투자 목적과 기술 수준을 모두 고려한 경우, 제조업 공동화 우려 및 제조업 고부가가치 부문의 국내 투자기회 손실 규모는 순유출 前(1991~2005년) 연간 평균 3억 4,400만 달러에서 순유출 後(2006~2014년) 연간 34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국내 고용 기회 손실) 고용 기회 손실 측면에 보면, **순유출 後(2006~2013)에 연간 평균 2만 4,000개 규모의 양질의 일자리 기회가 손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U턴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고용 기회 손실 규모는 순유출 前(1991~2005년) 연간 평균 4,242개에서 순유출 後(2006~2014년)에는 연간 평균 2만 4,104개의 양질의 일자리 기회가 손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 시사점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해외생산시설 및 기업을 국내로 다시 U턴시킬 수 있는 유인책 등 실질적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U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금융 및 입지 보조금 확대를 통해 설비투자 및 생산시설 확대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 둘째, 개성공단과 경제자유지역을 'U-turn 특구'로 활용하여 유턴기업 및 해외직접투자를 유인하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국내에 유턴하는 기업들이 베트남이나 중국에 비해서 유리한 임금 및 토지이용 비용을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해당 기업들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내 '전용 임대용지 허용', '입주기준 완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선진국의 기술과 판매망을 인수합병(M&A)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구조고도화'가 필요하다. 넷째, 국내외 투자의 선순환고리 형성을 위해 해외직접투자 시 국산설비 및 국내 전문인력 활용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1. 해외직접투자(OFDI) 증가

○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OFDI, 잔액기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국내시장의 투자 한계를 벗어나는 해외투자는 생산 및 수출에 긍정적이나 국내투자 부족으로 이어져 생산 및 고용에 제약을 가할 수 있음
 - 해외직접투자는 잔액 기준으로 1991~2005년 기간 평균 22.4%, 2006~2013년 기간 평균 24.8% 증가율을 보임
 - 해외직접투자는 투자 대상국의 고정자산을 형성하고 고용창출을 통해 경제 성장률 제고에도 기여하는 기회임
 - 반면, 국내 총고정본형성(설비투자, 건설투자, 지적재산생산물투자)은 1991~2005년 평균 5.2%에서 2006~2013년 평균 2.3%에 머물고 있음
- FDI 수지 측면에서 해외직접투자(OFDI)가 외국인직접투자(IFDI)를 상회
 - 외국인직접투자는 잔액기준으로 1991~2005년 기간 평균 27.0% 증가에서 2006~2013년 기간 평균 7.0%로 증가율 폭이 축소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

(단위: 억달러)

	1991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10	2013
해외직접투자 (OFDI, A)	33.3	132.8	215.0	386.8	491.9	747.8	979.1	1431.6	2190.5
외국인직접투자 (IFDI, B)	63.2	182.2	437.4	1048.8	1157.7	1219.6	946.8	1342.3	1673.5
FDI 순유출입 (B-A)	29.9	49.4	222.4	662.0	665.8	471.8	-32.3	-89.3	-5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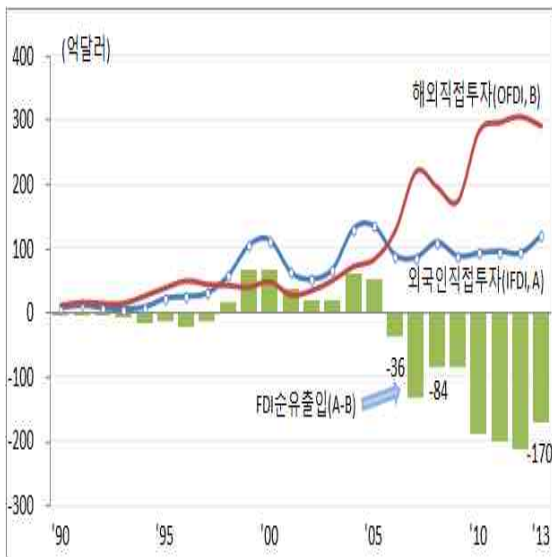
자료: UNCTAD Database.

○ FDI 수지 기준으로 해외투자 순유입 국가에서 해외투자 순유출 국가로 전환됨

- 한국의 FDI 수지(플로우 기준)는 2006년부터 해외직접투자(OFDI)가 외국인 직접투자(IFDI)를 상회하는 순유출 상태로 해외로 투자하는 국가로 전환

- 1991~1998년 : 중국과의 국교정상화(1992년)¹⁾ 등으로 교역량 증가, 요소비용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점차 증가하였음
 - 1999~2005년 : 외국환거래법(1999년)²⁾ 등 자본자유화 조치에 힘입어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음.
 - 2006~2013년 : 비금융기관의 해외 금융·보험업 건별 투자한도 폐지(2006년), 개인의 해외직접투자한도 증액(2006년), 기업의 해외현지생산 증대로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늘었음. 플로우 기준으로 순유출로 전환
 - 향후 분석 시기는 해외직접투자 순유출(2006년, 플로우) 전후로 구분
- 스톡 기준으로 2008년부터 순유출로 전환된 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순유출을 지속하고 있어 해외에서 투자를 받는 금액보다 해외로 투자하는 금액이 큰 국가로 전환
- 한국의 FDI 수지는 1990~2007년 기간 중 1997년을 제외하고 순유입 상태였으나 2008년 이후(2009년 제외)에 순유출 상황을 지속하고 있음

< 한국의 FDI 순유출입 추이(플로우) >



자료 : UNCTAD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원 재구성.

< 한국의 FDI 순유출입 추이(스톡) >



자료 : UNCTAD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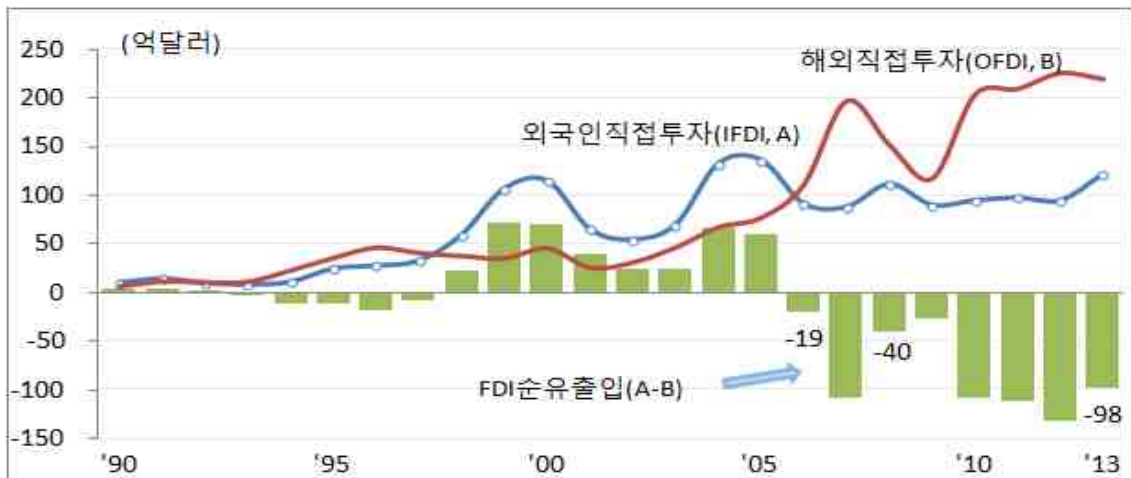
1) 중국과의 국교정상화(1992년) 이전인 1991년 대중국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3.3%였으나 1992년에는 10.4%, 1993년 18.2%, 1994년에는 27.1%로 증가
 2) 외국환거래법이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을 대체하며 외환거래의 자유화 폭이 확대.

○ 자원개발을 포함하지 않은 FDI 수지도 플로우 기준으로 여전히 순유출 국가나 그 규모가 작아짐

- 한국의 FDI 수지(해외직접투자의 자원개발을 제외할 경우)는 플로우 기준으로 2006년부터 순유출 국가로 전환되나 그 규모는 자원개발을 포함한 FDI 수지 금액에 비해 작음

- 한국의 FDI 수지(해외직접투자 자원개발 미포함)는 2006년 이후 순유출로 전환됨
- FDI 수지 규모를 보면, 순유출 後(2006~2013년) 평균 80억 달러 FDI 순유출로 자원개발을 포함한 FDI 수지 규모(평균 138억)보다 연간 58억 달러 작은 수준

< FDI 순유출입 추이(자원개발 제외, 플로우) >



자료 : UNCTAD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원 재구성.

주 : 해외직접투자(OFDI)의 자원개발 부분 제외 이후 FDI 수지 규모를 계산함.

○ 연구 목적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OFDI)의 현황 점검을 통해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해외직접투자(OFDI)의 순유출 前과 순유출 後의 투자 규모, 투자 국가, 투자 지역, 투자 업종, 투자 목적, 제조업의 투자 기술수준, 국내 U턴이 필요한 투자금액 추정 등을 통해 특징을 점검하고자 함
- 특히, 투자 규모는 주요국 해외직접투자와 비교를 통해 그 수준을 평가함

2. 한국 해외직접투자(OFDI) 증가의 특징

- (투자 규모) FDI 수치 기준으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OFDI) 및 순유출 규모는 주요국과 비교하여 작은 수준임³⁾
- 한국의 해외직접투자(OFDI) 규모(잔액기준, 순유출 전환 후)는 GDP 대비 14.0%로 4개국 평균값 28.1%보다 14.1%p 하회⁴⁾
 - 소득수준 : FDI 순유출(잔액 기준) 당시 기준으로 비교 대상 국가의 평균 1인당 GDP는 11,500달러로 한국(20,475달러)보다 8,925달러 낮은 수준⁵⁾
 - FDI 순유출 : 한국의 순유출 규모(잔액기준)는 GDP 대비 평균 2.0%로 4개국(이태리, 영국, 독일, 대만)의 평균값 12.2%보다 10.2%p 하회⁶⁾
 - 외국인직접투자(IFDI) :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잔액기준, 순유출 전환 후)는 평균 12.0%로 4개국 평균치(15.9%)를 3.9%p 하회⁷⁾

< 해외직접투자(OFDI) 및 순유출 수준 국제비교 >

		1인당 GDP (달러)	인구 (백만명)	순유출 (%)		교역 비중 (%)	제조업 비중 (%)	제조업 비중 (%고용)	순유출 연도
				OFDI (%)	IFDI (%)				
비교대상	이태리	7,453	56.5	2.8	12.1	45.3	28.9	29.1	1982
	영국	10,071	56.7	14.3	44.8	51.6	23.6	20.2	1986
	독일	19,501	79.3	13.1	27.2	49.7	29.2	28.3	1990
	대만	8,973	20.6	18.7	28.4	89.0	31.7	-	1991
	한국	20,475	48.9	2.0	14.0	107.2	28.2	17.3	2008
참고대상	일본	9,313	116.7	6.1	7.5	27.8	27.2	23.2	1980
	미국	12,576	227.6	4.4	19.9	20.7	20.8	19.1	1980
	캐나다	21,796	29.9	4.1	34.9	74.6	18.4	14.2	1997

자료 : IMF, UNCTAD, 한국은행 및 수출입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OFDI(스톡기준), IFDI(스톡기준), 교역 비중은 GDP 대비 비중임. 제조업 비중은 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비중(고용)은 총고용 대비 비중임.

- 3) FDI 관련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FDI 순유출 국가 중 한국 경제 상황과 유사한 국가를 선정. 비교대상 국가 선정 조건은 순유출 유무, 제조업 비중, 교역 조건 고려함. ① FDI 수치가 플로우 기준으로 3년 이상 순유출을 지속하고 스톡 기준으로 순유출 기록; ② 부가가치 기준으로 제조업 비중이 23% 이상인 국가; ③ GDP 대비 교역조건 비중이 50%에 근접 혹은 이상인 국가.
- 4) 해외직접투자(OFDI)는 순유출 전(잔액기준, 1991-2007년)에는 평균 GDP 대비 3.4% 기록. 플로우 기준으로 순유출 전(1991-2005년) GDP 대비 평균 0.7%, 순유출 후 GDP 대비 평균 2.1% 기록.
- 5) 소득수준(1인당 GDP)의 여타 FDI 결정요인을 고려하여 각국의 순유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있음. Dunning and Narula(1996)에 따르면 소득수준 모형은 세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음. 첫째, 모형분석은 투자발전 경로(IDP: Investment Development Path)를 설명하는 데 부족함. 둘째, FDI순유출입(잔액기준)은 해외직접 투자(OFDI)와 외국인직접투자(IFDI)의 구조변화를 설명하기에 부족. 셋째, 1인당 GDP는 국가의 발전정도를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음. 기존 연구(Abu Hassan(2011), Mohamed and Bruno(2012))에 따르면 국가의 해외직접 투자는 경제규모, 개방도(교역비중), 환율, 요소비용(단위노동비용) 등에 따라 결정됨.
- 6) 순유출입 규모는 순유출 전(1991-2007년, 잔액기준)에는 GDP 대비 평균 3.4% 순유출 유. 플로우 기준으로 순유출 전(1991-2005년) GDP 대비 평균 0.3% 순유출, 순유출 후 GDP 대비 평균 1.2% 기록.
- 7) 외국인직접투자(IFDI)는 순유출 전(1991-2007년, 잔액기준)에는 평균 GDP 대비 6.9% 기록. 플로우 기준으로 순유출 전(1991-2005년) GDP 대비 평균 1.0%, 순유출 후 GDP 대비 평균 0.9% 기록.

○ (투자 국가) 순유출 前에 미국과 중국 중심에서 순유출 後에는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 캐나다의 비중이 커짐으로서 다변화 정도 제고

-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작아지고 홍콩과 베트남의 비중이 점점 커짐
 -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순유출 前(1991~2005년) 평균 48.1%에서 순유출 後(2006~2014년)⁸⁾에 35.2%로 작아짐
 - 반면, 4개국(홍콩,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 캐나다)의 비중은 순유출 前(1991~2005년) 9.6%에서 순유출 後(2006~2014년)에 18.7%로 비중이 커짐
- 순유출 後에 상위 5개 국가의 비중이 작아지고 분산도 지수도 커지고 있어 다변화되는 것으로 분석됨
 - 상위 5개국이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순유출 前(1991~2005년) 67.6%에서 순유출 後(2006~2014년)에 55.9%로 11.7%p 작아짐
 - 허쉬만-허핀달 지수(H)⁹⁾ 추정치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의 국가 단위에서 다변화 정도가 제고됨
 - 허쉬만-허핀달 지수의 역수(H^{-1}): 분산도 지수는 순유출 前(1991~2005년) 평균 7.0에서 순유출 後(2006~2014년) 평균 10.9로 숫자가 커지고(다변화가 제고되고) 있음

< 국가별 투자 금액 및 비중 추이 >

(단위: 백만달러, %, %p)

지역	순유출 前 (1991~2005)		순유출 後 (2006~2014)		증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미국	14,415	24.1	41,356	19.2	26,941	-5.0
중국	14,344	24.0	34,531	16.0	20,187	-8.0
홍콩	2,899	4.9	12,975	6.0	10,076	1.2
네덜란드	2,250	3.8	7,842	3.6	5,591	-0.1
영국	2,109	3.5	7,851	3.6	5,743	0.1
인도네시아	1,992	3.3	5,905	2.7	3,913	-0.6
베트남	1,697	2.8	9,402	4.4	7,705	1.5
일본	1,214	2.0	4,328	2.0	3,114	0.0
오스트레일리아	743	1.2	9,480	4.4	8,737	3.1
캐나다	436	0.7	8,405	3.9	7,969	3.2
전체	59,688	100	215,857	100	156,168	

자료 : 수출입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원 재구성.
주 : 증감의 금액과 비중은 '순유출後 - 순유출前' 값임.

< 국가의 집중도 추이 >

(단위: %, %p)

	순유출 前 (1991~2005)	순유출 後 (2006~2014)	증감
상위 5개국	67.6	55.9	-11.7
상위 10개국	80.6	71.5	-9.1
상위 15개국	87.3	81.2	-6.2
상위 20개국	91.7	87.3	-4.5

자료 : 수출입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원 재구성.
주 : 투자금액 기준.

8) UNCTAD의 해외직접투자(OFDI)와 외국인직접투자(IFDI) 자료는 2013년이 가장 최근 자료임. 한국 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OFDI) 자료는 2014년까지 업데이트 됨.

9) 허쉬만-허핀달(Hirschman-Herfindahl)지수(H)의 역수(H^{-1})를 계산하여 해외직접투자의 지역별 다변화 정도를 측정. 숫자 크기가 클수록 다변화되었음을 의미. $H = \sum_i^N (X_i/X)^2$ (X_i 는 i 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투자 지역) 아시아와 북미 지역을 넘어 유럽과 중남미, 그리고 대양주 지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투자 지역이 세계시장에 골고루 퍼져있음

- 아시아와 북미의 비중은 작아지고 유럽과 중남미의 비중은 커짐

- 아시아와 북미가 전체 투자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순유출 前(1991~2005년) 71.2%에서 순유출 後(2006~2014년) 64.6%(아시아 41.7%, 북미 22.9%)로 작아짐
- 유럽, 중남미, 그리고 대양주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순유출 前(1991~2005년) 26.1%에서 순유출 後(2006~2014년) 32.4%로 커짐

- 지역 단위의 집중도를 보면, 순유출 後 분산도가 좋아졌음

- ‘아시아(상위 1개 지역)’와 ‘아시아 및 북미(상위 2개 지역)’의 집중도가 순유출 前 46.3%와 71.2%에서 순유출 後에 각각 41.7%와 64.6%로 낮아짐
- 허쉬만-허핀달 지수(H) 추정치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는 지역 단위에서 다변화 정도가 제고됨
- 허쉬만-허핀달 지수의 역수(H^{-1}): 분산도 지수는 순유출 前(1991~2005년) 평균 3.0에서 순유출 後(2006~2014년) 평균 3.6으로 숫자가 커지고(다변화가 제고되고) 있음

< 한국의 지역별 투자금액 및 비중 추이 >

(단위: 백만달러, %, %p)

지역	순유출 前 (1991~2005)		순유출 後 (2006~2014)		증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아시아	27,629	46.3	90,056	41.7	62,427	-4.6
북미	14,851	24.9	49,384	22.9	34,533	-2.0
유럽	9,412	15.8	37,850	17.5	28,438	1.8
중남미	5,100	8.5	20,398	9.4	15,298	0.9
중동	726	1.2	3,700	1.7	2,974	0.5
아프리카	892	1.5	2,699	1.3	1,807	-0.2
대양주	1,079	1.8	11,771	5.5	10,692	3.6
전체	59,688	100	215,857	100	156,168	

자료 : 수출입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원 재구성.

주 : 증감의 금액과 비중은 ‘순유출 後 - 순유출 前’ 값임.

< 지역별 집중도 추이 >

(단위: %, %p)

구분	순유출 前 (1991~2005)	순유출 後 (2006~2014)	증감
아시아	46.3	41.7	-4.6
아시아+북미	71.2	64.6	-6.6
아시아+북미+유럽	86.9	82.1	-4.8

자료 : 수출입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원 재구성.

- 주 : 1) 투자금액 기준.
- 2) 지역집중도에 ‘유럽’ 혹은 ‘중남미’가 대체.

- (투자 목적) '현지시장진출¹⁰⁾과 '제3국진출'을 위한 투자 증가로 국내 산업공동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반면, 산업활성화를 위한 투자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국내 산업공동화 우려 부문에서 현지시장 확보를 위한 '현지시장진출'과 '제3국진출'을 위한 투자가 순수출 後에 크게 늘어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큼
 - '현지시장진출' 부문은 현지시장확보 등 긍정적 효과와 생산시설 해외이전 등 부정적 결과가 상존하며 어느 부문이 더 클지는 산업구조 조정 노력에 달렸음
 - '제3국진출'은 세계 절감, 수송비용 및 생산비용 절감 등을 위해 생산거점을 이전하여 제3국에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국내 생산거점 이동, 국내 제조업 공동화를 유발할 우려가 있음
 - 비용감소를 의도하는 '저임활용' 투자는 국내 제조업 생산기지를 요소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게됨
 - 광의의 비용감소를 의미하는 보호무역타개 부문 투자는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¹¹⁾을 통한 경제영토 확대에 활용도 적어진 것으로 판단됨
- 국내 산업활성화 지원 부문에서는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순수출 後에 크게 증가하나 '수출촉진¹²⁾을 위한 투자 비중은 크게 작아짐
 - 최근에는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개방 수준 확대에 현지기업과의 공동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투자 동기가 종전의 '수출촉진'에서 '현지시장진출'로 바뀌고 있음
 - 자원개발 부문은 국내 경제의 해외자원 의존도가 높은 것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음

< 투자 목적별 투자금액 및 비중 추이 >

(단위: 백만달러, %, %p)

		순유출 前(1991~2005)		순유출 後(2006~2014)		증감	
		금액(A)	비중(B)	금액(C)	비중(D)	금액(CA)	비중(DB)
국내 산업공동화 우려	현지시장진출	9,499	15.9	90,135	41.8	80,636	25.8
	제3국진출	498	0.8	21,840	10.1	21,342	9.3
	저임활용	4,939	8.3	11,145	5.2	6,206	-3.1
	보호무역타개	1,405	2.4	754	0.3	-650	-2.0
국내 산업활성화 지원	수출촉진	23,344	39.1	28,724	13.3	5,380	-25.8
	선진기술도입	2,288	3.8	7,136	3.3	4,848	-0.5
	자원개발	6,339	10.6	52,212	24.2	45,873	13.6
	원자재확보	553	0.9	150	0.1	-403	-0.9
기타		10,823	18.1	3,761	1.7	-7,062	-16.4
전체		59,688	100	21,5857	100	156,168	

자료 : 수출입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원 재구성. 주 : 투자금액 기준.

10) 현지시장진출은 현지시장에서의 생산, 가공, 판매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를 의미.
 11)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51개국의 GDP를 합치면 전 세계의 73.2%를 차지. 자유무역협정은 칠레(2004.4.1발효)를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11건이 발효. 폴란드,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4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도 타결됨.
 12) 수출촉진은 제3국으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를 의미.

○ (투자 업종) 투자 업종이 순유출 前 제조업 일변도에서 순유출 後 광업, 금융, 전문과학 및 기술 등 서비스 산업 부문 투자가 증가

- 제조업 부문의 비중이 작아지고 광업 부문의 비중이 커짐
 - 제조업 부문이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순유출 前 (1991~2005년)에 52.8%였으나 순유출 後(2006~2014년)에는 31.0%로 작아짐
 -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은 2006년 이후 해외투자가 크게 늘었음. 전체 해외직접투자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순유출 前(1991~2005년) 5.1%에서 순유출 後(2006~2014년) 22.7%로 크게 증가
- 금융, 전문과학 및 기술 분야 등 고부가가치 부문 투자가 증가
 -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등 부문의 비중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
 - 서비스 부문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순유출 前 3.7%→ 순유출 後 10.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순유출 前 3.2%→ 순유출 後 8.4%)의 비중이 크게 증가

< 업종별 투자금액 및 비중 추이 >

(단위: 백만달러, %, %p)

	순유출 前 (1991~2005)		순유출 後 (2006~2014)		증감	
	금액(A)	비중(B)	금액(C)	비중(D)	금액(C-A)	비중(D-B)
광업	3,071	5.1	49,013	22.7	45,942	17.6
제조업	31,503	52.8	66,812	31.0	35,309	-21.8
건설업	1,028	1.7	5,335	2.5	4,307	0.7
도매 및 소매업	11,761	19.7	17,480	8.1	5,719	-11.6
출판,영상,방송통신	1,966	3.3	4,259	2.0	2,293	-1.3
금융 및 보험업	2,199	3.7	22,005	10.2	19,806	6.5
부동산업 및 임대업	2,927	4.9	18,472	8.6	15,545	3.7
전문,과학 및 기술	1,896	3.2	18,134	8.4	16,239	5.2
기타	3,338	5.6	14,347	6.6	11,009	1.1
전체	59,688	100	215,857	100	156,168	

자료 : 수출입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원 재구성. 주 : 투자금액 기준.

○ (제조업 투자 기술 수준¹³⁾) **순유출 後에 제조업 투자는 고기술 부문 및 중화학공업이 주도하는 반면, 저기술 부문의 투자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작아짐**

- 제조업 기술 수준별로 보면, 제조업 세부 업종에서 고기술 부문의 투자가 크게 늘었으나 첨단기술과 저기술 부문의 투자는 크게 감소
 - 고기술 부문이 순유출 前(1991~2005년) 24.7%(77억 7,300만 달러)에서 순유출 後(2006~2014년) 40.1%(268억 달러)로 크게 증가한 반면, 첨단기술은 35.9%(113억 달러)에서 26.0%(174억 달러)로 작아짐
 - 저기술 부문은 순유출 前(1991~2005년) 20.7%(65억 1,200만 달러)에서 순유출 後(2006~2014년) 15.1%(101억 달러)로 작아짐
 - 다만, 제조업에 속하는 세부 산업중에서, 첨단기술과 고기술 부문의 비중이 순유출 前(1991~2005년) 60.6%(금액 190억 7,300만 달러)에서 순유출 後(2006~2014년) 66.1%(442억 달러)로 커짐
-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순유출 前(1991~2005년) 77.9%(245억 3,200만 달러)에서 순유출 後(2006~2014년)에 81.6%(545억 200만 달러)로 증가함

< 제조업의 특수 분류별 투자금액 및 비중 추이 >

(단위: 백만달러, %, %p)

항목		순유출 前 (1991~2005)		순유출 後 (2006~2014)		증감	
		금액(A)	비중(B)	금액(C)	비중(D)	금액(C-A)	비중(D-B)
기술 수준	첨단기술 업종	11,300	35.9	17,400	26.0	6,100	-9.9
	고기술 업종	7,773	24.7	26,800	40.1	19,027	15.4
	중기술 업종	5,922	18.8	12,600	18.8	6,678	0.0
	저기술 업종	6,512	20.7	10,100	15.1	3,588	-5.6
중화학/ 경공업	중화학공업	24,532	77.9	54,502	81.6	29,970	3.7
	경공업	6,948	22.1	12,261	18.4	5,314	-3.7

자료 : 수출입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원 재구성. 주 : 투자금액 기준.

13) 기술수준은 첨단기술, 고기술, 중기술, 저기술 업종으로 구분. 첫째, 첨단기술 업종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등임. 둘째, 고기술 업종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등임. 셋째, 중기술 업종은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금속',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등임. 넷째, 저기술 업종은 '식료품', '음료', '담배', '섬유제품(의복제외)',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가죽·가방 및 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가구', '기타제품' 등임.

3. 국내 U턴이 필요한 투자 추정

- (국내 U턴이 필요한 투자 금액)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내로 유턴되어야 할 투자 규모는 **순유출 後** 연간 평균 34억 달러, **고용 기회 손실**로는 **순유출 後**에 연간 평균 2만 4,000개로 추정됨
- 국내 U턴이 필요한 부문은 제조업 부문, 제조업 공동화 우려 부문, 제조업 고부가가치 부문에 모두 해당되는 해외투자를 선택
 - 첫째, 투자 업종별 : 제조업 부문의 해외투자가 국내 U턴이 필요함. 국내에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광업과 비교역재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 부문의 해외투자는 국내 U턴 투자로 대체하기 어려움¹⁴⁾
 - 둘째, 투자 목적별 : 제조업 공동화가 우려되는 '현지시장진출', '제3국진출', '저임활용' 부문 등이 국내 U턴이 필요한 해외투자
 - 셋째, 제조업 투자 기술 수준별 : 상대적인 경쟁우위를 가지는 고부가가치¹⁵⁾ 부문의 해외투자의 국내 U턴이 필요함
 - 국내 산업구조고도화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 목적별로는 산업공동화 우려 부문, 기술수준으로는 고부가가치 부문을 모두 충족하는 해외투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국내 U턴이 필요

< U턴이 필요한 부문의 국내 투자기회 손실 규모 추정 >

(단위: 백만달러)

항목	순유출 前 (1991~2005)	순유출 後 (2006~2014)
제조업 공동화우려 (현지시장진출, 제3국진출, 저임활용, 보호무역타개)	연간 평균 680 (10,200)	연간 평균 5,144 (46,300)
제조업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및 고기술)	연간 평균 1,273 (19,100)	연간 평균 4,900 (44,100)
U턴이 필요한 금액 (제조업 공동화 및 고부가가치 부문)	연간 평균 344 (5,161)	연간 평균 3,400 (30,600)

자료 : 수출입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원 재구성. 주 : 투자금액 기준.

- 주 : 1) 제조업 공동화 우려는 '현지시장진출', '제3국진출', '저임활용', '보호무역타개' 부문이 해당.
- 2) 제조업 고부가가치 부문은 '첨단기술업종'과 '고기술 업종'을 의미.
- 3) U턴이 필요한 부문은 제조업 부문, 제조업 공동화 및 제조업 고부가가치에 모두 해당하는 투자를 의미.
- 4) ()안 수치는 해당 기간의 총 국내 투자기회 손실 규모임.

14)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하수 등 인프라 부문의 해외투자도 국내 U턴 투자로 대체하기 어려움.

15) 고부가가치 부문은 첨단기술과 고기술 수준을 의미.

- U턴이 필요한 부문(제조업 공동화 및 고부가가치 부문)에 해당하는 국내 투자기회 손실 규모는 순유출 後 연간 평균 34억 달러를 상회
 - 제조업 공동화 우려 부문의 국내 투자기회 손실 규모는 순유출 前(1991~2005년) 연간 6억 8,000만 달러에서 순유출 後(2006~2014년) 연간 51억 4,400만 달러로 증가
 - 제조업의 고부가가치 부문의 국내 투자기회 손실 규모는 순유출 前(1991~2005년) 연간 12억 7,300만 달러에서 순유출 後(2006~2014년) 연간 49억 달러로 증가
 - U턴이 필요한 부문(제조업 공동화 및 고부가가치)의 국내 투자기회 손실 규모는 순유출 前(1991~2005년) 연간 3억 4,400만 달러에서 순유출 後(2006~2014년) 연간 34억 달러로 증가

- 고용 기회 손실 측면에서, 국내 U턴 필요 금액에 대한 고용 기회 손실은 순유출 後에 연간 평균 2만 4,000개에 해당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추정
 - 제조업 공동화 부문의 고용 기회 손실 규모는 순유출 前(1991~2005년) 연간 평균 8,610개에서 순유출 後(2006~2014년)에 연간 평균 3만 6,437개로 추정
 - 제조업 고부가가치의 부문의 고용 손실 규모는 순유출 前(1991~2005년) 연간 평균 1만 7,242개에서 순유출 後(2006~2014년) 연간 평균 3만 4,974개로 추정
 - U턴이 필요한 투자 부문의 고용 기회 손실은 순유출 前 연간 평균 4,242개에서 순유출 後 연간 평균 2만 4,104개에 해당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추정

< U턴이 필요한 부문의 고용 기회 손실 추정 >

(단위: 개)

	순유출 前 (1991~2005)	순유출 後 (2006~2014)
제조업 공동화 우려 부문 (현지시장진출, 제3국진출, 저임활용, 보호무역타개)	연간 평균 8,610 (129,157)	연간 평균 36,437 (327,929)
제조업의 고부가가치 부문 (첨단기술 및 고기술)	연간 평균 17,242 (258,628)	연간 평균 34,974 (314,766)
U턴 필요 부문의 기회 손실 (제조업 공동화 및 고부가가치 부문)	연간 평균 4,242 (63,627)	연간 평균 24,104 (216,937)

자료 : 수출입은행 통계DB와 한국은행 ECOS 자료를 이용하여 HRI 추정 및 재구성.

주 : 1) 제조업 공동화 및(혹은) 고부가가치 부문의 해외투자금액에 고용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출. 1991-1993년은 1990년 고용유발계수, 1994-1997년은 1995년 고용유발계수, 1998-2001년은 2000년 고용유발계수, 2002-2003년은 2003년 계수, 2004-2005년은 2005년 계수, 2006-2012년은 해당 연도 계수, 2013년과 2014년은 2012년 계수를 사용하여 계산.

2) ()안 수치는 해당 기간의 총 고용 기회 손실 규모 추정치임.

<참고> 주요국의 유턴 지원 정책

○ 미국 등 주요국이 해외 기업의 본국 U턴을 위한 유인책을 확대하고 있음

- 미국, 대만, 그리고 일본은 자국 기업의 유턴을 위한 유인책을 확대하고 있음
 - 미국은 유턴 기업의 이전비용의 20%를 보조, 설비투자비용의 조세감면 추진하고 있고 향후 기업의 해외이익에 대한 과세 등 추가 유인책 도입
 - 일본은 수도권 공장설립을 금지하는 법규 폐지 및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등 일본내 입지환경 개선
 - 대만은 U턴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 용자제도, 기술향상 지원을 추진
 - 미국 등 해외직접투자를 크게 늘렸던 국가들이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해외이전기업이 본국 재이전(reshoring)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한국도 세제 혜택, 투자 및 고용 보조금을 통해 기업 U턴 유인책 지원 중
 - 한국은 세제 혜택, 입지, 투자, 고용 보조금과 경제자유구역과 국가·일반 산업단지 입주 우선권 부여 등의 정책이 시행 중
 - 한국은 FTA 확대를 통한 경제 영토 확장, 신흥국 인건비 상승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해외생산시설을 국내로 U턴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 U턴 대상기업 선정 시 외국인투자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국 U턴 기업 지원정책 >

	순유출 ^{주)}	지원 내용
한국	4.0%	- 법인세와 소득세는 최대 5년간 50~100% 감면 - 신규 및 중고 설비 도입시 관세 50~100% 감면 - 입지 보조금 9~40% 지원 - 설비투자 보조금 4~22% 지원 - 국내사업장 추가 고용 1인당 1년간 1,080만원의 고용보조금 지원 - 경제자유구역 내 장기임대산단 입주 허용, 국가·일반 산업단지 입주 희망시 입주 우선권 부여
미국	8.4%	- 기존 해외유보금 14%, 향후 기업해외이익에 최대 19% 과세 - 이전비용 20% 현금 지급(U턴 후 5년간 법인세 감면액 이내) - 설비투자 세제혜택 연장(1년->2년)
일본	16.8%	- 공장 등 제한법 폐지(2002년) - 공업입지법 개정(2004년) 등 규제완화 - 지자체 주도로 건물, 설비 고용 등 보조금 지원
대만	37.3%	- 이전비용, 기업대출 및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계획 마련(2009년)

자료 : 1) 산업통상자원부, "U턴기업지원법에 따른 U턴기업 14개사 최초 선정", 보도자료, 2014년 3월 28일.

2) 오바마 대통령 발표 세제개편안(2012.1.25), 미국 2016회계연도 예산안 의회 제출안.

주 : FDI 순유출(잔액 기준)은 2013년 기준으로 GDP 대비 비중을 의미.

4. 시사점

- U턴 생산시설 및 기업에 대한 유인책 확대, U턴 특구 활용, 해외직접투자의 구조고도화, 국내외 투자의 선순환 고리 형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
 - (U턴 생산시설 및 기업에 대한 유인책 확대) 해외생산시설 및 기업을 국내로 다시 U턴시킬 수 있는 유인책 등 실질적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함
 - 한-미FTA 발효 등 FTA 확대를 통한 경제 영토 확장과 신흥국 인건비 상승 등 여건 변화로 국내 생산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생산시설을 국내로 다시 회귀시키는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함
 - 국내에서 기존 제조업 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 U턴 기업을 지원중이지만 실적이 미미한 상황임¹⁶⁾
 - 유턴기업지원법 제정을 통한 U턴 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조세, 자금, 입지, 인력) 확대를 통해 설비투자 및 생산시설 확대 유도 필요
 - 해외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업체 700여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U턴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는 ‘설비투자관련 금융지원과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45.6%)’ 와 ‘국내정착에 필요한 공장부지 및 생산인력 지원(31.8%)’ 순으로 응답됨¹⁷⁾
 - (U-turn 특구 활용) 개성공단과 경제자유지역을 ‘U-turn 특구’로 활용하여 유턴기업 및 해외직접투자를 유인하는 정책 방안 필요
 - 개성공단을 ‘저임활용’ 목적의 해외직접투자가 국내로 유입되는 유인 요인으로 활용. 개성공단은 베트남이나 중국 등지에 비해서도 임금이나 토지이용 비용이 더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음
 - 개성공단의 월 평균 임금은 63.8달러에 불과하고 한국의 시화공단은 이보다 13배 많은 831달러의 평균임금을 보이고 있음
 - 중국의 청도공단 역시 평균임금이 개성보다 3배 높은 194달러에 달했고 베트남의 탄뚜언공단도 월 95.8달러로 개성보다 1.5배나 평균임금이 높음
 - 한편,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에 유턴하는 기업들에 대한 ‘전용 임대용지 허용’, ‘입주기준 완화’ 등 검토 필요

1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관한 법률 시행(2013.12월)」 이후 정부가 선정한 U턴 기업은 현재 14개사에 그치고 있음.

17) 대한상공회의소, “제조업 경영환경 內憂外患“, 보도자료, 2013년 8월 20일.

- (해외직접투자의 구조고도화) 선진국의 기술과 판매망을 인수합병(M&A)를 통해 확보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구조고도화'가 필요
 - 늘어나는 해외직접투자(OFDI)의 질적 제고를 위해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M&A를 통한 선진기술 및 판매망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 있음
 - 해외 고급 인력 확보 등을 위한 연구소 설립 및 특허보유기업의 인수합병(M&A)을 확대
 - 해외의 기술·인력·판매망을 국내 산업기반과 연계한다는 적극적 접근이 중요

- (국내외 투자의 선순환 고리 형성) 해외직접투자시 국산설비활용 및 국내 전문인력 파견 등을 통해 해외직접투자와 국내 투자의 선순환 고리 형성
 - 국제적 분업체계 및 생산과 판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내에서는 핵심기술 개발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 해외에서는 이와 관련된 새로운 시장개척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고 해외 투자시 국산설비활용, 국내 전문인력 파견 등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 있음

임희정 연구위원 (031-288-7953 / 02-2072-6218, limhj9@hri.co.kr)

< 參考 文獻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0),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생산성, 무역, 고용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10-2.
- 대한상공회의소(2013), “제조업 경영환경 內憂外患”, 보도자료, 8월 20일.
- 산업통상자원부(2014), “U턴기업지원법에 따른 U턴기업 14개사 최초 선정”, 보도자료, 3월 28일
- 에너지경제연구원(2006), 『동북아 에너지 협력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12월.
- 현대경제연구원(2012), 『FDI 순유출 급증과 ‘U턴 특구’ 전략』, 경제주평 12-15, 04-27.
- 현대경제연구원(2013),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 국제 비교와 시사점』, 현안과과제 13-56, 11-27.
- 현대경제연구원(2014), 『제조업을 업그레이드하자 - 미·일·독 제조업 R&D 정책 동향 및 시사점』, VIP리포트 14-07, 02-17.
- 현대경제연구원(2014), 『제조업 혁신 정책의 현황 평가와 시사점』, VIP리포트 14-25, 07-16.
- 현대경제연구원(2015), 『일본 제조업 혁신 부진의 교훈 고투입저성장의 원인』, VIP리포트 15-06, 02-09.
- 한국은행(2014),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투자 균형에 대한 평가』, BOK 이슈노트, 7월.
- 한국은행(2014), 『우리나라 FDI의 순유출 전환요인과 시사점』, BOK 경제리뷰, 2014-7, 9월.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http://www.koreaexim.go.kr/kr/work/check/oversea/use.jsp>)
- Dunning, John H. (1981), “Explaining the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position of countries: Towards a dynamic or developmental approach”, *Weltwirtschaftliches Archiv*, 117, pp. 30-64.
- Dunning and Narula(1996), "The investment and development path revisited: Some emerging issue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Government*(Eds.), J.H. Dunning and R. Narula, Routledge, London, pp. 1-41.
- Duran, Juan J. and Ubeda, Fernando(2001), "The investment development path: a new empirical approach and some theoretical issues", *Transnational Corporations*, vol. 10, no. 2, August.
- Kalinova, B., A. Palerm and S. Thomsen(2010), “OECD’s FDI Restrictiveness Index: 2010 Update”, OECD Working Papers on International Investment, 2010/03,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5km91p02zj7g-en>)
- Kayam, Saime S. and Hisarcikilar, M.(2009), "Revisiting the Investment Development Path(IDP): A Non Linear Fluctuation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and Quantitative Studies*, V6-2, pp. 63-82.
- Mistura, Fernando(2014), “The OECD FDI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 Policy Analyst, OECD Session 1.2, June 12th, Melbourne (<http://www.adbi.org/files/2014.06.12.cpp.sess1.2b.mistura.oecd.fdi.regulatory.index.pdf>)
- OECD(2014), “FDI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 June 12th.
- UNCTAD, statistics(Foreign direct investment)(<http://unctad.org/en/Pages/Home.aspx>)

HRI 경제 통계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2.3	3.0	3.7	3.6	3.6	3.5	3.6	3.6
	민간소비 (%)	1.9	2.0	2.0	2.6	2.3	3.0	2.6	2.8
	건설투자 (%)	-3.9	6.7	1.9	1.8	1.9	1.8	4.3	3.0
	설비투자 (%)	0.1	-1.5	7.5	3.9	5.7	4.2	6.0	5.1
	지재투자 (%)	8.6	7.3	6.5	5.9	6.2	7.3	7.0	7.1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508	799	392	408	800	320	360	680
	무역수지 (억 달러)	283	440	202	231	433	192	234	426
	수출 (억 달러)	5,479	5,596	2,833	2,936	5,770	2,949	3,074	6,023
	(증가율, %)	(-1.3)	(2.1)	(2.5)	(3.7)	(3.1)	(4.1)	(4.7)	(4.4)
	수입 (억 달러)	5,196	5,156	2,631	2,705	5,336	2,757	2,840	5,597
	(증가율, %)	(-0.9)	(-0.8)	(2.6)	(4.4)	(3.5)	(4.8)	(5.0)	(4.9)
소비자물가 (평균, %)	2.2	1.3	1.4	1.9	1.7	2.0	1.9	1.9	
15~64세 고용률 (%)	64.2	64.4	65.0	65.6	65.3	66.0	66.5	66.2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